

03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현황과
과제¹⁾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페미니즘 교육은 필요한가

지난 1월 청와대 게시판에는 초중고에서 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21만 명 이상이 해당 게시물에 서명하였다²⁾. 청와대는 공식답변을 통해 인권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인권교육이 범교과학습의 한 영역일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가지지도,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를 다루는 인권교육 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중심적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또한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범교과학습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명시해온(이규은 외, 2008:7) 우리 교육에서 성평등교육의 강화를 촉구하는 현 상황을 돌아보면서 본고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과 이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을 짚어보고, 학교 성평등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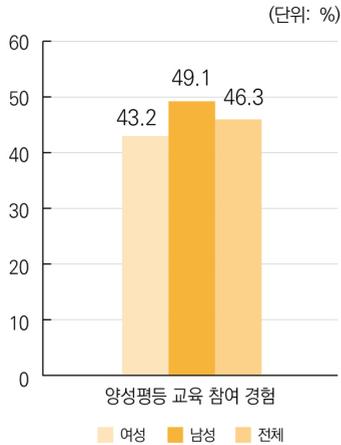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실

교육과정에서의 현실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나타난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중고생의 양성평등교육 참여율은 46.3%로 양성평등교육이 보편화된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진 방법으로는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49.0%,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되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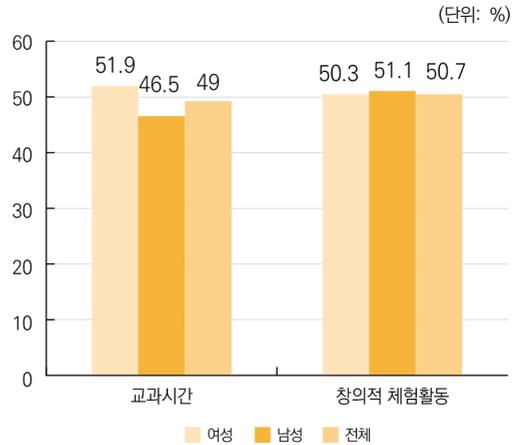
1) 본고는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의 발표논문 '초중등 페미니즘 교육의 추진 여건 및 정책 방향의 고찰'을 요약, 발췌한 것임.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자료: 최유진 외(2016). p.359 재구성

[그림 1] 양성평등교육 참여율



주: 복수응답

자료: 최유진 외(2016). p.359 재구성

[그림 2] 양성평등교육 이수 방법

<표 1> 양성평등교육 시수

(단위: %, 명)

구분	계 (사례 수)	1시간 미만	1시간~4시간 미만	4시간~7시간 미만	7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3시간 미만	13시간~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전체	100 (168)	17.2	68.8	11.6	2.4	0.0	0.0	0.0

자료: 최유진 외(2016). p.359 <표 IV-35> 재구성

<표 2> 양성평등교육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계 (사례수)	특강 형태	유인물	참여활동	시청각 교재	토론 하기	사례조사	기타
전체	(168)	59.9	23.1	23.0	30.2	4.0	5.9	0.8

자료: 최유진 외(2016). p.360

응답이 50.7%로 거의 비슷하다(그림 2).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만, 교육의 양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시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의 86.0%가 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양성평등교육이 단타성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양성평등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수 방법 또한 특강형태(59.9%)이며,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경우가 30.2%, 유인물이 23.1% 순으로 교수방법에서도 상당수의 양성평등교육이 체계적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행사성 교육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표 2>).

이전부터 양성평등교육은 학교재량활동으로 실시되기는 했으나, 양성평등교육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부터이다(이규은 외, 2008).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기존에 16개였던 범교과학습을 35개로 확대하면서 양성평등교육이 추가되었다(이규은, 2008:6). 범교과학습을 38종까지 확대하였던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양성평등교육이 범교과학습으로 존치되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범교과학습의 수를 10개로 대폭 줄이면서 현재는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다. 즉, 현재로서는 학교양성평등교육이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은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의 10개이고, 각 범교과학습 아래 세부분야의 범교과 학습을 지정하고 있으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범위에도 성평등교육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청와대는 초중등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방안으로 범교과학습 중 인권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겠다

<표 3>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학습 및 의무 운영 사항

범교과학습	법령에 근거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시수			
	주제	시수		
안전건강교육	안전교육	생활안전	12	51
		교통안전	11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8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10	
		재난안전	6	
		직업안전	2	
		응급처치	2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안전교육통합)		15	
	보건교육 (최소 1개 학년)		17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2	
인성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2	
	생명존중 (자살 예방)		4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2017).

고 밝혔으나, <표 3>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인권교육의 방향은 장애인해교육이나 생명존중으로만 설정된 상태이다. 성평등과 유사하게 ‘차별’과 ‘인권’, ‘사회의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별도의 범교과로 지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평등 또한 별도의 범교과로 독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22만 명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범교과학습에서 소외받고 있는 성평등교육이 교과과정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을까. 필자가 성차별이 나타나기 쉬운 6개 교과를 대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여섯 교과 중 성평등을 성취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교과는 도덕교과 하나뿐이며, 성평등교육의 영역을 가족관계 등 성평등과 밀접한 가치까지 포괄하면, 실과교과가 하나 더 추가되는 수준이다(교육부, 2015). 나머지 교과에서는 성평등 관련 개념들이 전혀 언급되거나 명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교과의 경우, 사회불평등에 대한 비중이 크고, 그 범위 또한 지역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민주주의와 불평등 등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을 학년별로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성별 불평등은 명시적으로 다루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교육이 성별 불평등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제고해야할 문제라 생각된다.

정책추진 체계에서의 현실

우리법에서 성평등교육은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의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법

에는 학교 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 정책추진과 심의·의결기구(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시,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조항만으로는 학교에서 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법은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광의의 의미에서의 성평등교육(gender equality in education)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평등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또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요건이나 기준들을 명시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단적으로 현재의 법들은 양성평등교육이 무엇이냐는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의 부재는 정책의 범위와 교육내용의 불분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성교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뒤에서 언급할 각 시도교육청 추진체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성교육과의 혼동 또는 성교육으로의 대체로 인해 진정 성평등교육이 목표로 하는 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은 밀려나거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효과적인 성평등교육을 위한 여건의 조성 관련 지원 또한 전무하다. 성평등교육을 위한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인증, 관련 기관의 지정과 협업 등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학교장 자율에 성평등교육이 맡겨있는 현장 상황에서 교육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원활한 협조체계도 없을 수밖에 없다. 성평등교육이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의미있는 범교과 교육과정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평등교육지원법(가칭)’이 마련되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률 체계 내에 성평등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과 방안이 정비된 법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법외에도 행정적 추진체계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

교육정책의 특성 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집행의 중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경우, 최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 업무 전담자가 새로 지정된 상태이나, 이전의 여성정책담당관실과 같이 교육부의 성평등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양성평등교육, 학교에서의 성차별, 혐오 문제 등 제한된 영역에서의 성평등 관련 이슈를 맡고 있으며, 여전히 성교육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교과서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맡는 등 부처별로 다원화된 상태이다³⁾.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청별 소관부서가 천양지차이다. 각 시도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업무의 소관부서를 살펴보면 각 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을 어떠한 맥락에서 펼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4>는 각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평등교육 담당부서를 조사한 결과인데, 서울과 광주는 성평등교육을 위한 전담팀 혹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교육청⁴⁾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팀 내 다른 업무와 함께 성평등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부에서는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이 서로 다른 전달 체계를 가지고 분리 운영되는데 비해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은 이 둘을 같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표 4>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전남의 4개 교육청만이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다른 체계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성평등교육

과 성교육이 같은 담당자에게 부과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보건 담당자가 이 두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형태이다. 성평등교육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이 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각 교육청들의 성평등교육 담당 영역은 민주시민/인권, 학생생활, 안전/폭력, 학교보건의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보건 담당으로 지정된 교육청이 7개(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로 가장 많고, 학생생활 담당의 경우가 5개(부산, 대구, 인천, 전남, 경북), 안전이나 폭력 부분이 3개(대전, 강원, 경남), 민주시민/인권이 2개(서울, 광주) 순이다. 청와대나 교육부가 성평등교육을 범교과학습인 인권교육의 일부로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권이나 민주시민 영역으로 성평등교육을 다루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성교육이나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이를 바라보고,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교육청들이 성평등교육을 보건이나 학생생활지도의 영역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성평등교육을 성교육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그 이상의 교육적 역할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강제성이 없는 양성평등교육이 강제성이 있는 성교육에 부수적 교육 차원에서 실행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3) 그 외 교육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국공립대 양성평등조치사업은 고등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본 연구가 초중등에 초점을 두는 관계로 본고에서는 따로 거론하지 않는다.

4) 대구교육청의 경우, 실제 성교육 담당자가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기는 하나, 홈페이지 상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별도로 업무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표 4〉 시도교육청 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담당 부서 현황

지역	부서	담당	담당 업무
서울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성인권전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권 정책 업무 총괄 - 성인권적 관점에서 교육청 정책에 대한 검토 - 성인권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 구성·운영 - 성인권 증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성인권 의제 발굴 및 홍보 - 성인권 교원 직무연수 운영 - 성인권 콘텐츠 및 자료 개발·보급 - 성관련 부서 업무 협력 및 전문성지원 - 성인권 유관 기관 협조 - 양성평등교육
	체육건강과	학교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육·성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성폭력 예방 및 근절정책 추진 - 학교성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계획 수립·추진 - 학교성폭력 대책기구 운영, 성폭력 신고접수 One-Stop 시스템 운영 - 성폭력 처리 매뉴얼 개발·보급 - 디지털 성폭력 예방업무
부산	건강생활과	학교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보건교육 및 장학 - 성범죄 접수 및 상담업무 - 학교 성범죄 전담 ONE-STOP지원단 구성·운영 - 학교보건 연구·시범학교 운영 - 학생 성교육
	건강생활과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업무
대구	학교생활문화과	대안건강교육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인천	학교생활교육과	안전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사안 조사 및 조치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육 및 성교육(성폭력) 교육과정 운영 및 직장 성희롱 연수
	학교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교육
대전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광주	민주인권생활교육	성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시도평가(정성평가) 보고서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및 특별조사단 운영 - 성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 초등/중등 성 사안 관련 민원처리(국민신문고, 성폭력 사안 등) - 초등/중등 성폭력 사안처리 및 컨설팅 업무 - 초등/중등 성폭력 피해자 위기관리지원 - 초등/중등 성교육 연구회 운영 및 안정화 지원단 운영 - 초등/중등 성폭력 행위자 위기관리 지원 - 교사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 성교육 장학자료 개발 보급 - 성교육(성범죄) 예방 정책 자문단 운영 - 성폭력 예방 및 신고 방법 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지역	부서	담당	담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업무 - 성고충 상담 관련 업무 - 교직원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 관련 업무 -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 통합시스템 관리 업무 - 학교 성 사안 관련 자치위원회 업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울산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급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교육
세종	창의인재교육과	보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성희롱, 성폭력) 업무 - 여성교육정책 중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경기	감사관	시민감사담당	-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체육건강교육과	학생보건정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 관련 업무 - 양성평등 업무
강원	교육안전과	생활교육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법률 지원 - 학교폭력(성폭력) 분쟁 조정 지원
		학생안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업무 - 성폭력 관련 민원 및 사안 처리 - 학생 성폭력 가·피해 특별교육이수기관 관리
충북	체육보건안전과	보건담당	-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충남	유아특수복지과	유아교육팀	- 유치원 보건(성교육)
	체육인성건강과	학교보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성교육 운영 - 양성평등교육 운영 -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시·도교육(지원)청 평가 업무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업무
		인성인권팀	-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업무
전북	인성건강과	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보건교육(성교육) 기본방향 계획 수립 - 보건교육(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학교 보건교육(성교육) 컨설팅 - 학생 성교육 및 성인권 교육, 양성평등교육 운영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업무
전남	체육건강과	보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교육 운영 - 건전한 성문화 개선 사업 운영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문화	- 양성평등교육 업무
경북	학생생활과	대안교육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 통계 업무 - 학생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업무
경남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운영 - 교원 성범죄 예방교육 - 교원 간 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 및 민원 처리
제주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보건	- 성교육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자료: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2018년 9월말 기준)

교수자의 역량 및 전문성의 현실

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나 전달방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수자가 큰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성평등교육의 교수자로서의 적절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보인다. 안상수 외(2011:193)가 국내 대학(원)생 5,555명

을 대상으로 대규모 성평등의식조사를 시행한 바에 따르면, 교육대생의 성평등의식이 전문대 및 일반대 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젊은층이 중고령층보다 성평등수준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표 5〉 시도교육연수원에서의 교사대상 성평등교육 현황

연수원	프로그램 명	시수
서울	(원격, 사회복지)모두가 행복한 성평등과 성교육	15
	(원격, 사회복지)직장 내 성교육	4
부산	(원격)교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필수 직무연수	4
	(원격)직장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필수 직무연수	2
대구	(원격)직장 내 성교육 직무연수	30
인천	(원격)올바른 성문화 만들기	15
대전	(원격)구성애의 性담살: 구성애와 함께하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30
광주	(원격)직장 내 성교육	4
울산	교원통합직무연수(인성, 청렴, 폭력 예방-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16
세종	교원필수정책직무연수(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교육, 자살예방, 청렴, 다문화인식개선, 학교폭력 예방, 장애인식개선)	22
경기	(원격)학교 성교육 지도의 실제 원격 직무연수	10
강원	(원격)직장 내 성교육	4
충북	(원격)모두가 행복한 성평등과 성교육	15
	(원격)성폭력 예방교육(중등)	15
	(원격)직장 내 성교육	4
충남	(2018년 신설)학교 지원분야별 필수 직무연수(성교육3/가정폭력1/인성교육4/교권보호1/장애이해1/아동학대1/학교폭력1/자살예방1/공교육정상화1/행동강령1)	15
	(원격)성교육 직무연수(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
	(원격)성교육	4
전북	x	
전남	x	
경북	(원격)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
경남	(원격)필수정책 직무연수(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초등	15
	(원격)필수정책 직무연수(성교육, 심폐소생술, 인성, 자살예방)-중등	15
제주	(원격)모두가 행복한 성평등과 성교육	15
	(원격)성폭력 예방교육(중등)	15
	(원격)성폭력 예방교육(초등)	15
	(원격)직장 내 성교육	4

자료: 각 시도교육청 및 산하연수원 홈페이지.(2018년 5월 기준)

있다. 실제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의 21.7%는 학교 선생님이 성차별적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최유진 외, 2016:356). 을 초에 번진 스쿨미투에서도 드러났지만, 범죄적 성격의 성희롱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교사들의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은 공공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국가수준의 기본계획에서 학교성평등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한 제6차 경제사회발전 기본계획(1983~1991) 이래 교사 대상 성평등의식 제고는 네 차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거론되어온 정책과제임에도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오랜 주장이 무색할만큼 미진하다. <표 5>는 각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대상 프로그램 중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을 수집,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연수원이 성교육 또는 성폭력 관련 연수만을 실시하고 있고, 성평등의식 제고에 관한 교육은 17개 시도교육연수원 중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이러한 운영현황은 일차적으로 지침과도 관계가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현재 교사 대상 의무연수 과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무 외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의무규정이 넘쳐나는 교육현장에서 비의무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초중등 성평등교육을 위한 준비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성평등 가치는 너무나 간과되어 왔다.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논할 때면, ‘요즘은 여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 ‘여학생들이 기가 세다’는 식의 반박이 늘상 따라붙으면서 성평등교육은 한물 간 퇴색된 이슈로 취급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붓물처럼 쏟아지는 여성의 #미투와 우리 사회가 특히, 남녀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성별 갈등은 성평등의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이 어떠한지를 심각하게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우리 학생들 사이의 성평등 의식의 격차가 어떠한지, 페미니즘 교육을 추진하기에 과연 우리의 교육여건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았다. 그리고 앞질러가는 사회의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현장서의 여건과 역량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것을 검토했다. 이제 연구의 결론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초중등 페미니즘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성평등교육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되도록 독립된 법안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 법교과학습의 지정은 사실상 교육과정의 개정될 때마다 재지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리고 법이 확실한 교육의 경우, 법교과학습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법은 단순히 법교과 학습 차원에서의 성평등의식교육 강화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교육에서의 성평등 문제를 고루 담아내야 하며,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지원체계, 교원의 연수 등의 의식 제고 방안, 다양한 실태조사 등을 같이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청이 성평등 전달자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 업무의 일환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성교육 차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의 통합을 의미하고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와 같은 보건 위주의 성교육 토양에서 성평등교육이 성교육 틀 안에서 의미 있는 교육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일선에서는 성교육관련 업무가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달자의 지정은, 관련 사업의 발굴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전달자가 무슨 일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콘텐츠는 얼마든지 풍부해지게 된다.

셋째, 전문 지원기관이 지정,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최근에 제정한 범교과 학습 관련 법안들은 모두 이를 지원하는 전문 사업 운영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부터, 교원 연수, 정책 수립, 실태조사까지 상당 부분을 참여,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교육 또한 현장에서의 영향력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규모 있는 사업을 통해 전문 지원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명시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양성평등은 범교과학습에서조차 제외된 상황이다. 지난 1월에 국민청원이 제기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대해 청와대는 인권교육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인권교육 차원의 접근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 범위 때문이다. 사실상 성평등교육이 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성평등교육 그 자체로 범교과학습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본고에서 다루기는 어려우나, 성평등이 인권

으로만 묶일 수 있다면, 사실상 현재 범교과학습을 지정되어 있는 성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또한 인권교육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지난 2월에 제기된 청와대의 답변은 현재 교육정책의 주체자들이 성평등교육을 독립된 교육영역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하위영역으로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겠다.

다섯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성평등 의식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교원 대상 성평등교육은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토록 저조한 상태는 아니었다(이상원 외, 2005). 그러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결국 현재는 의무시수 교육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교원대상 원격 연수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교원연수원을 주로 이용하는 현장 교사들에게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성희롱교육과 같이 교원 대상의 의무교육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 본다. 예비교원에 대한 연수도 매우 중요하다. 명시적인 교직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보조적으로 사범대, 교육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성평등의식 제고는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십대 청소년들의 성평등의식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교사에 대한 적절한 제고 조치가 없다면, 스쿨미투와 같은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여섯째, 풍부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양성평등교육이라는 타이틀의 교육용 프로그램으로는 2000년대 초반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한 것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이 거의 유

일하다. 그 외에는 몇 해 전 여성가족부가 성인권 관련 자료를 유초중고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장 교사들과 면담을 해보면, 사실상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확인되고,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지적되었다(김수자: 2018). 그리고 이

는 성평등교육 강사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동원한, 작금의 현실에 맞는 이슈와 관점이 담긴 현장감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 교육부(2015).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 김수자(2018).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 중고등 대안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경희·황정임·김은지·강민정·최윤정·문희영(2017).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여성가족부.
- 이상원, 민무숙, 김재인, 최윤정(2005).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여성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안상수·박성정·최윤정·김금미(201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Ⅲ):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규은·박한숙·강진희(2008). 범교과 학습 영역 국가기준 제시 방식 및 학교급별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유진·이택면·황정임·마경희·주재선·김은지·이현재·문희영(2016).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